

단기집중 행정법 총론

Educational Producer For Your Success

※ 정오 및 오타자를 수정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양서를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저자 : 이상현

	변경 전	변경 후														
20p. 관련판례 1번 수정	1. 우리 헌법재판소는 초토세(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판결 요지〉 초토세(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 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초토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헌재 1994.7.29, 92헌바49).	1.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초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사항 유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 〈판결 요지〉 토초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 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헌재 1994.7.29, 92헌바49).														
174p. 2. 부관의 종류 - 기한	①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② 종류 <table><tr><td>정지조건</td><td>조건의 성취로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td></tr><tr><td>해제조건</td><td>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는 것</td></tr></table>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는 것	① 의의 : 행정행위의 효력이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② 종류 <table><tr><td rowspan="2">효력유무</td><td>시기(始期)</td><td>기한의 도래로 효력 발생</td></tr><tr><td>종기</td><td>기한의 도래로 효력 소멸</td></tr><tr><td rowspan="2">발생시기 (時期)</td><td>확정기한</td><td>발생시기가 확실한 기한</td></tr><tr><td>불확정기한</td><td>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기한</td></tr></table>	효력유무	시기(始期)	기한의 도래로 효력 발생	종기	기한의 도래로 효력 소멸	발생시기 (時期)	확정기한	발생시기가 확실한 기한	불확정기한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기한
정지조건	조건의 성취로 비로소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해제조건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 상실되는 것															
효력유무	시기(始期)	기한의 도래로 효력 발생														
	종기	기한의 도래로 효력 소멸														
발생시기 (時期)	확정기한	발생시기가 확실한 기한														
	불확정기한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기한														
211p. 6. (2)	<table><tr><td>부당한 행위</td><td>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td></tr></table>	부당한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table><tr><td>부당한 행위</td><td>직권취소나 심판취소는 가능하다.(소송취소 X)</td></tr></table>	부당한 행위	직권취소나 심판취소는 가능하다.(소송취소 X)										
부당한 행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당한 행위	직권취소나 심판취소는 가능하다.(소송취소 X)															
286p. 5.	<table><tr><td>손해 배상</td><td>①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td></tr></table>	손해 배상	①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table><tr><td>손해 배상</td><td>① 일반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벌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의 분실 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td></tr></table>	손해 배상	① 일반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벌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의 분실 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 배상	① 요건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 배상	① 일반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벌적 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정 손해배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의 분실 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입증책임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86p. 6. (1) 조정부	<table><tr><td>조정부</td><td>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td></tr></table>	조정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table><tr><td></td><td>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td></tr></table>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302p. 2.	<table><tr><td>행정상 강제집행</td><td>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td></tr></table>	행정상 강제집행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table><tr><td>행정상 강제집행</td><td>①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다만, 일반, 추상적 의무 위반은 즉시강제로 파악되는 경향이다.</td></tr></table>	행정상 강제집행	①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다만, 일반, 추상적 의무 위반은 즉시강제로 파악되는 경향이다.										
행정상 강제집행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행정상 강제집행	①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② 다만, 일반, 추상적 의무 위반은 즉시강제로 파악되는 경향이다.															
312p. (2) ②	② 징수	② 가산금 등 징수														

단기집중 행정법 총론

Educational Producer For Your Success

318p.	3. 법적 한계 성문법 또는 불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제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5. 구제 <table><tr><td>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td><td>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td></tr><tr><td>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td><td>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td></tr></table>	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	3. 법적 한계 성문법 또는 불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u>특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u> 4. 구제 <table><tr><td>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td><td>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td></tr><tr><td>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td><td>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td></tr></table>	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공법적 형식에 의한 급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私法)적 형식에 의한 급부	민사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									
318p. 3	3. 법적 한계 성문법, 불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문제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3. 법적 한계 성문법, 불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u>특히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u> 4. 구제 <u>영업허가의 거부나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u>								
345p. 아래 표	관련판례 위로 위치 수정									
441p.	12 기속력	5. 기속력								
442p. (7) ②와 [관련판례] 사이에 내용 삽입	12 재심 1.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근거 일반적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제3자 재심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요건 취소판결로 권익이 침해되는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다.									
472p. (3)	(3) 집행력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해 인정될 수 있다(김동희).	(3) 집행력 <u>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하여 인정될 수 있다.</u>								